

2022년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회의 회장 기조연설

한국경제의 7대 과제

정진욱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한국경제학회 제51대 회장)

2022년 1월

서론

2021년 12월에 한국경제학회는 모든 정회원의 투표를 통하여, ‘한국경제의 7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과정은 2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후보 과제 30개를 한국경제학회 사무국에서 고른 후, 이를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 패널위원 63명의 1차 투표에 부쳐 15개의 후보 과제로 압축하였다. 그 후 1차 선정된 15개의 후보 과제를 한국경제학회 정회원 1,078명의 2차 투표에 부쳐, 득표 순으로 7개의 주요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7대 과제를 보고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2022년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회의의 회장 기조연설을 대신하고자 한다.¹ 선정된 7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위: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2위: 저출산 문제

3위: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4위: 잠재성장률 제고

5위: 가계부채 문제

6위: 소득불평등 문제

7위: 국가부채 문제

¹ 한국경제학회가 7대 과제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강인수 (숙명여대), 민세진 (동국대), 박정수 (서강대), 신관호 (고려대), 전현배 (서강대), 황성현 (인천대) 등 여섯 분의 교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1.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90년대 초중반 이후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국가 전체의 생산성은 직접 관측하기 어려운 대상이므로, 그 측정을 위하여 여러가지 지표들이 사용된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인데,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다. 다음 <표 1-1>은 그 연구들의 일부를 기간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1-1>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 변동률 추이 (단위: %)

	'81-'85	'86-'90	'91-'95	'96-'00	'01-'05	'06-'10	'11-'15	'16-'20
EU KLEMS (2009)	5.2	4.0	2.4	2.2	1.3			
한진희·신석하 (2008)	3.7	3.8	1.9	1.8	2.8			
KDI (2012)	3.6	3.3	1.7	2.0	1.4	1.5		
권지호 외 (2019)					2.2	1.9	1.0	0.9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은 90년대 중반 이후 눈에 띄게 낮아졌다. 국가간 총요소생산성의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높지 않다는 사실은 잘 나타난다. 다음 <표 1-2>는 국가간 총요소생산성의 변동률을 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이듯이,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어느 기간이든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높지 않은 편이다.²

<표 1-2> 국가간 총요소생산성 변동률 비교 (부가가치 기준, 단위: %)

	'81-'90	'91-'95	'96-'00	'01-'05	'06-'10	'11-'15
한국	0.36	0.22	0.12	0.23	0.76	0.21

² 유일한 예외는 '06-'10 의 기간인데, 이 기간에 발생한 전세계적 원자재가격 상승과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이 서구에 비하여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가능한 추론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2009년에는 크게 낮아졌으나, 2010년에 바로 반등하였다.

미국	0.19	0.18	0.47	0.87	0.21	0.14
일본	0.63	-0.24	0.14	0.99	-1.11	N/A
프랑스	0.72	0.19	0.42	0.08	-0.32	0.00
핀란드	0.28	0.52	1.06			
독일				0.24	0.30	0.57
영국				1.03	-0.05	-0.05
EU12				0.18	-0.20	0.16

(출처: 한국생산성본부 (2007, 2017))

김원규·최현경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것은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에 기인한 바 크다. 다음 표는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을 자본투입, 노동투입, 생산성 향상의 세 요인으로 분해한 결과이다.

〈표 1-3〉 우리나라 GDP 증가율의 요인분해 (단위: %)

	GDP 증가율 (연평균)	기여도		
		순자본스톡	노동	총요소생산성
1972-1980	8.67	5.50	2.41	0.77
1981-1990	9.45	3.61	1.79	4.06
1991-1995	8.08	4.19	1.28	2.62
1996-2000	5.34	2.87	-0.04	2.52
2001-2005	4.62	2.10	0.32	2.20
2006-2010	4.03	1.72	-0.27	2.58
2011-2015	2.92	1.36	0.59	0.97
전 기간	6.76	3.34	1.11	2.32

(출처: 김원규·최현경 (2017))

이 표를 보면, 경제성장 초기의 우리나라 GDP 는 주로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을 늘려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즉, 1970년대의 GDP 증가율은 연평균 8.67%인데, 그 중 5.50%가 자본투입량의 순증가에 기인한 것이고, 2.41%는 노동투입량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나머지 0.77%만이 생산성 제고를 통한 성장이었다. 1980년대는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가장 높았던 기간이었다. 이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 9.45%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6%가 생산성 향상에 기인한 성장이었다. 1990년대 들면서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하락하기 시작한다.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GDP 성장률이 현저히 낮아지는데, 노동의 기여도가 크게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의 기여도는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다가 2010년대에는 경제 성장률이 더욱 낮아지면서 생산성의 기여도 역시 크게 낮아진다.

이렇게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낮아진 것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하락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예를 들어, Jones and Lee (2016)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2014년 현재 34개 OECD 국가 중 28위로, 상위 17개국 평균에 비해 50% 가까이 낮음을 보이고, 그 원인으로 서비스 산업에서의 낮은 노동생산성을 지목한다. 즉, OECD 평균으로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90% 정도인데 비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4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비슷한 관점이지만, 김원규 (2017)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기업규모별 생산성 격차가 생산성 둔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선도기업과 여타 기업의 기술혁신 격차가 세계적인 생산성 하락의 원인이라는 Andrew et al. (2016)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물론, 제도적 비효율성이나 지나친 규제 등도 우리나라 생산성 하락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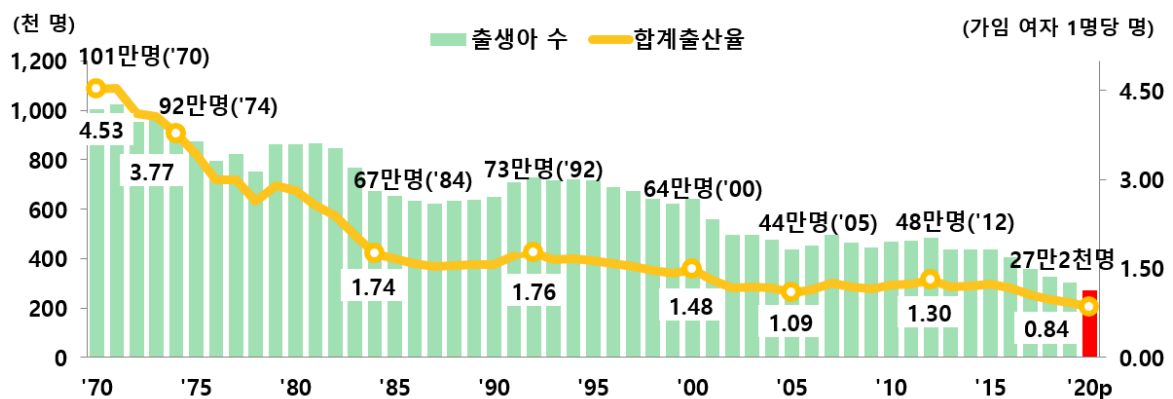
많은 학자들은 최근 급속히 발전한 디지털 기술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생산성 둔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Gal et al. (2019)은 국가간 패널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인 산업의 기업들이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사실을 실증하였다. Sorbe et al. (2019) 역시 디지털 기술을 채택한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다는 점을 보이지만, OECD 국가들의 경우 기업 간의 기술격차가 전체적인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수 있음도 보였다. Mosiashvili and Pareliussen (2020)은 에스토니아(Estonia)의 기업간 자료를 이용하여 디지털 기술이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직·간접적으로 향상시킴을 실증하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 분명하므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신산업’의 육성이 한국경제

가 직면한 저성장 극복의 중요한 해결 방안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2. 저출산 문제

통계청의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20년 신생아 수는 272,400명이고,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³ 신생아 수가 30만명 이하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고, 2018년에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져 0.98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19년에 0.92명, 2020년에 0.84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다음 <그림 2-1>은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그림 2-1>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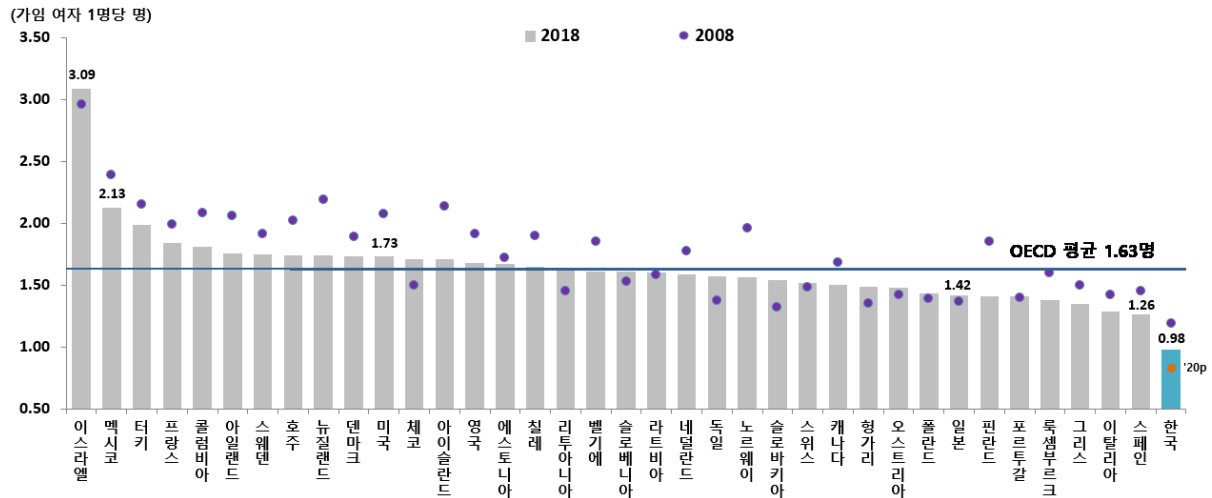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3쪽에서 전재함)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현재 OECD 회원국 중 최저이며, 유일하게 1명 이하인 나라이다. OECD 국가들의 2018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63명인데, 우리나라는 0.98명에 불과하다. 다음 <그림 2-2>는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을 비교한 것이다.

³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정의된다.

〈그림 2-2〉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2008 및 2018)



(출처: 통계청,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10쪽에서 전재함)

이렇게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초인데, 통계청의 예측에 따르면 2020년에 우리나라 인구는 32,700명 순감소할 것으로 보인다.⁴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인구를 장기예측하는데, 2021년 12월에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의하면, 중위 추계를 기준으로 할 때 인구가 향후 10년간은 연평균 6만명 내외 감소하여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5,019만명, 2070년에는 3,766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저위 추계를 따르면 2040년에 4,755만명, 2070년에 3,153만명으로 감소 폭이 더욱 심화된다. 다음 <표 2-1>은 통계청의 장기 인구예측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2-1〉 우리나라의 장기 인구변화 예측

지표	총인구 (만명)		
시나리오	중위 추계	고위 추계	저위 추계
1960	2,501		
1970	3,224		

⁴ 통계청,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20쪽.

1980	3,812		
1990	4,287		
2000	4,701		
2010	4,955		
2020	5,184	5,184	5,184
2030	5,120	5,244	5,015
2040	5,019	5,293	4,755
2050	4,736	5,150	4,333
2060	4,262	4,805	3,752
2070	3,766	4,438	3,153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3쪽)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된다. 첫째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만혼과 초산 연령의 상승 및 가임 여성 수의 감소가 출산율을 낮추는 큰 요인이다.⁵ 둘째는 사회경제학적 요인인데, 자녀양육비용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주택가격의 급상승, 사회적 돌봄체계의 부재 등이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들이다.⁶ 셋째는 문화적 요인으로, 결혼이나 자녀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이 변화한 점과 출산과 육아에 대한 가부장적 사회제도에 기인한다.⁷ 정부는 오랫동안 다양한 방식의 출산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출산율 부양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을 고려할 때, 출산장려금 등의 경제적 지원보다, 교육제도의 획기적 개선이나 사회적 돌봄체계의 정비 등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는 두 가지 경로로 타격을 입는다. 하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 인구의

⁵ 국회예산정책처 (2018) 등 참조.

⁶ 이삼식 (2005), 송유미·이제상 (2011)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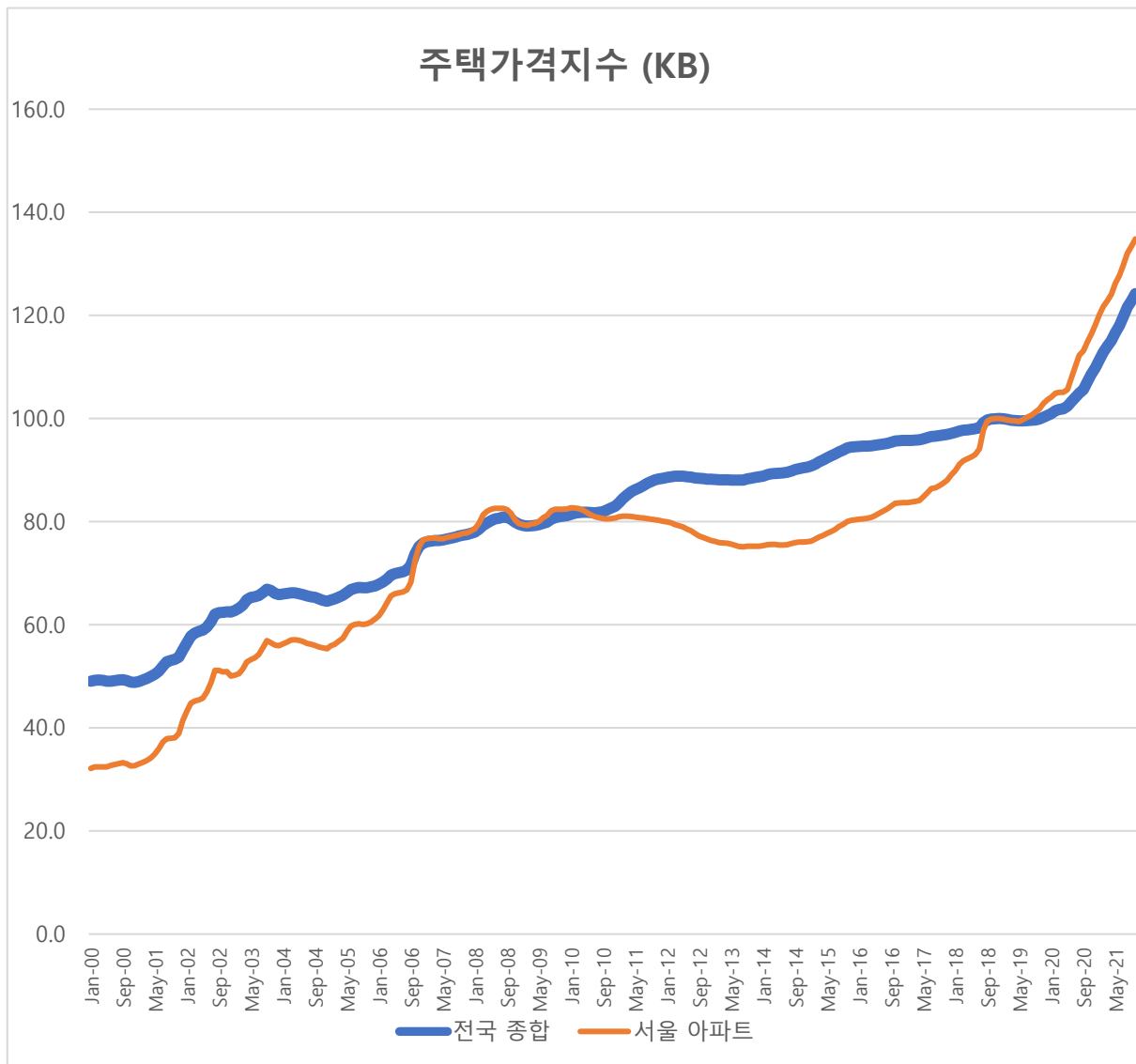
⁷ 송유미·이제상 (2011) 등 참조.

축소로 인한 내수의 위축이다. 이상림 (2012)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정도를 추계하였는데, 추계에 적용한 시나리오 세 개 모두 일관되게 우리나라의 노동력에 심각한 부족분이 발생할 것임을 보인다. 김원규·황원식 (2017)은 동태적 최적화 거시모형을 이용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산가능인구가 0.1%p 감소할 경우, 투자는 연평균 0.96%, 노동은 0.22%, 총요소생산성은 0.07%, GDP 는 0.30%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박준우·여찬구 (2021)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소비 감소 등에 대하여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인구감소와 저출산의 악순환이 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3.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크게 상승하였다. KB 부동산 통계에 의하면, 2021년 11월의 주택가격은 5년 전인 2016년 11월에 비하여 전국적으로 46.0% (KB 매매가격지수, 전국 종합), 서울 아파트만 보면 61.2% (KB 매매가격지수, 서울 아파트) 상승하였다. 다음 <그림 3-1>은 2000년 1월 이후의 월별 주택가격지수의 변동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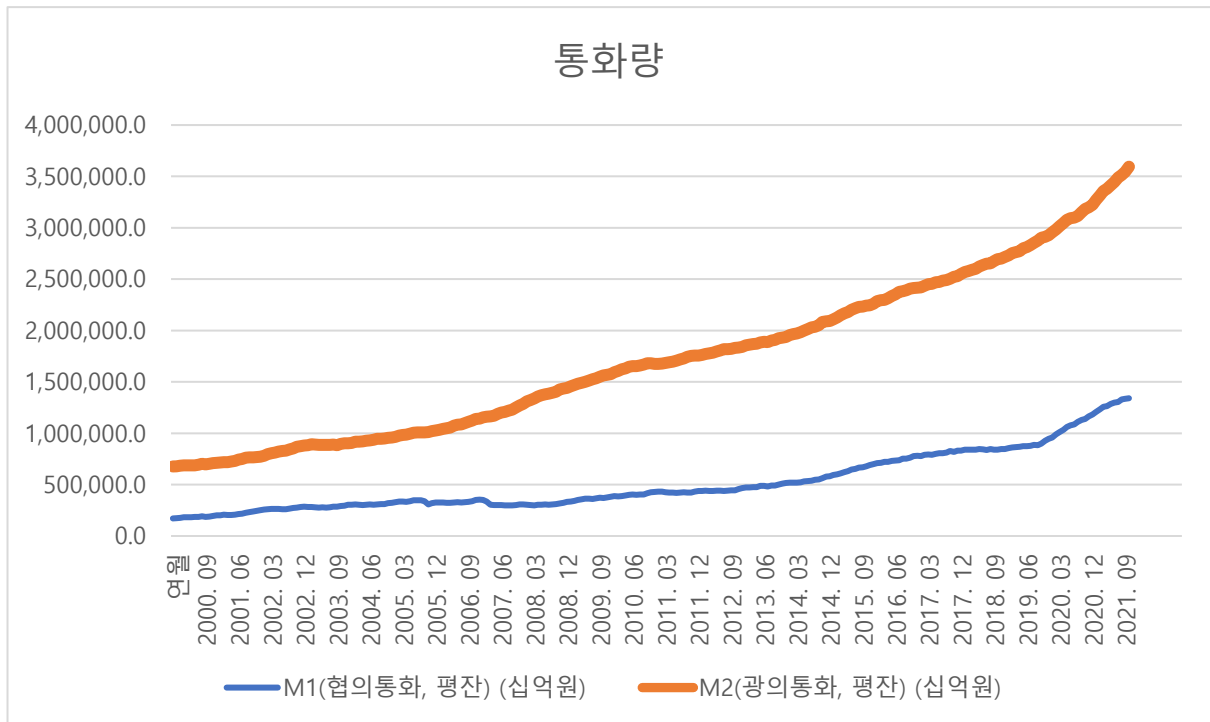
〈그림 3-1〉 우리나라 주택가격지수의 변동 추이



(출처: KB 부동산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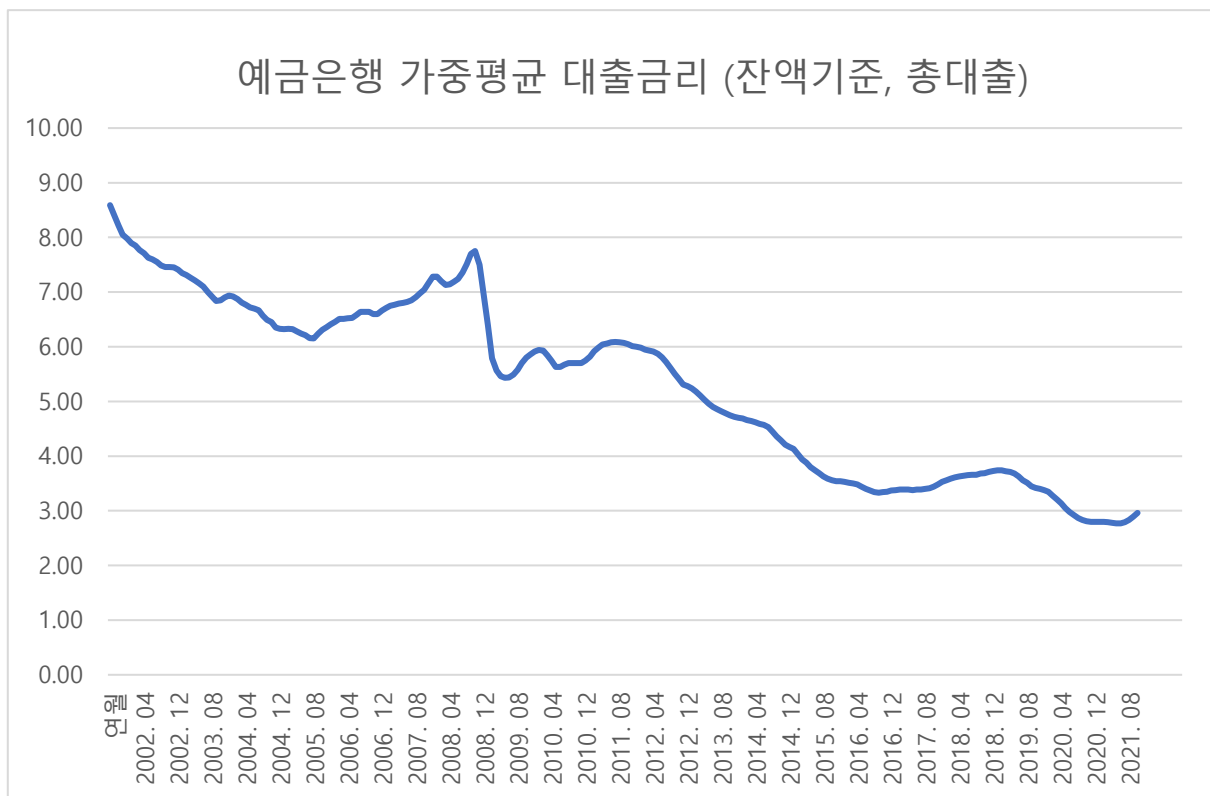
최근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대규모 양적완화로부터 촉발되고, COVID-19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급격한 재정정책으로 더욱 심해진 유동자금의 증가 및 금리 하락이다. 다음 〈그림 3-2〉와 〈그림 3-3〉은 각각 우리나라 통화량과 금리의 변동 추이이다.

〈그림 3-2〉 우리나라 통화량의 변동 추이



(출처: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그림 3-3〉 우리나라 금리의 변동 추이



(출처: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위 그림들에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시점과 2019년 COVID-19 발발 시점을 기점으로 통화량은 증가하고 금리는 하락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났는데, 다만 국가별로 늘어난 유동자금이 금융/실물자산 중 어디에 집중되었는지는 차이를 보인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두번째 요인은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실패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현 정부는 집권 초기인 2017년 6월 19일에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처음 발표한 이래 2021년 2월 4일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까지 총 26회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다.⁸ 그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 대출규제, 다주택자 중과세, 투기과열지역 지정 등의 수요억제 정책, 둘째, 보유세와 거래세의 인상 등 조세 정책, 셋째, 재개발-재건축의 요건 강화 및 분양가 상한제 등의 직접적 규제 정책, 넷째, 공공개발 및 3기 신도시 등의 공급확대 정책이 그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정책들 중 상당수가 부동산 시장의 공급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내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의 인상이나 재개발-재건축의 억제 등은 상당한 공급축소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의 인상과 상대적으로 늦게 추진된 신도시 및 공공개발 사업 등은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를 갖고 있지만, 신도시 건설이나 정부주도 개발은 주택을 ‘생산’하는 것이어서 실제 공급이 실현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므로,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충분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내구재의 경우, ‘생산’에 의지하기보다는 ‘매물 증가’를 통한 공급확대가 훨씬 효율적

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 정책위키
(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571) 참조.

인 방안임을 간과한 듯하다.

결국 반복적인 수요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 시도하였지만,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금리마저 낮아 가격 상승을 오래 막기는 어려웠다. 더구나, 대출규제 등의 수요억제 정책은 부자에게 유리한 제도여서, 역진적 자산 배분 효과를 유발하여 형평성마저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산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순자산지니계수는 2016년 이후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첫째,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비소유자 사이의 자산 격차가 확대되었고, 둘째, 수요억제 정책으로 비소유자의 부동산 취득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우석진 외 (2021)에서 인용한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의 연도별 순자산 지니계수와 주택 매매가격 상승율을 제시한다.

〈그림 3-4〉 우리나라 자산불평등도와 주택가격 상승율



(출처: 우석진 외 (2021)에서 전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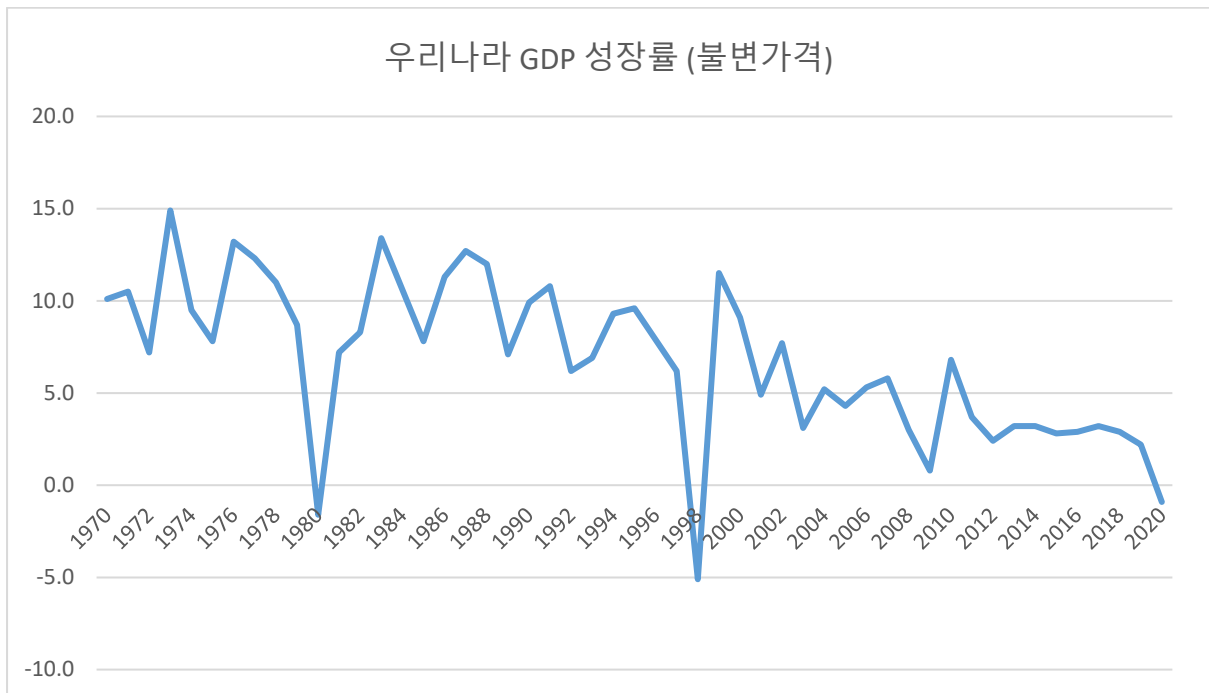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이제 평균적인 근로자가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세대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 시장의 수

급을 정상화시켜 가격이 서서히 내려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폭등보다 더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만일 일본의 90년대 부동산 가격 폭락과 비슷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우려를 증폭시키는 한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부동산 공공 공급이 그것이다. 민간 공급은 공급계획을 세웠다가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을 취소하는 등의 유연성을 갖지만, 정부의 예산과 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공공 공급에는 그런 유연성의 여지가 적다. 이미 시작된 금리의 단계적 인상으로 인하여 부동산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공 공급 물량까지 발생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4. 잠재성장률 제고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내지 않으면서 한 국가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성장률’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우선 실제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은 통계로 쉽게 확인된다. 다음 <그림 4-1>은 우리나라 GDP 의 연도별 성장률 추이이다.

〈그림 4-1〉 우리나라의 실제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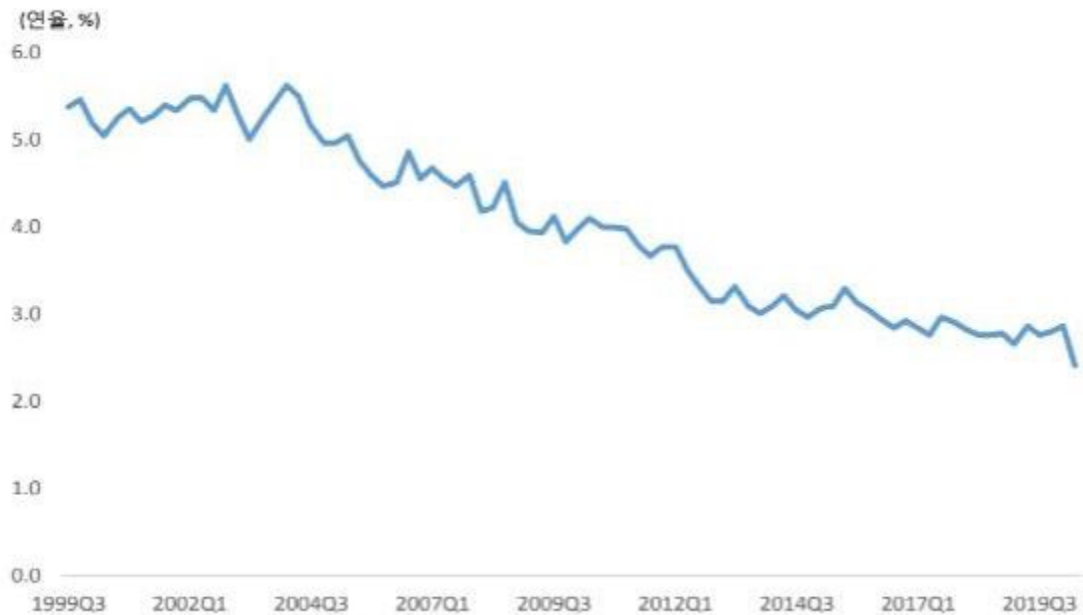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위 그림에서 보이듯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1973년에 14.9%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1970년대 10%를 넘었던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1980년대엔 8%대로 낮아졌고, 2000년대와 2010년대는 각각 4%대 후반과 3%대 초반으로 낮아졌다. 이렇게 실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역시 하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잠재성장률은 직접 관측되지 않으므로 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연구는 많지만, 황종률 (2021)이 가장 최근의 것이다. 황종률 (2021)은 다양한 모형을 설정하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하였다. 다음 〈그림 4-2〉는 그 주요 결과 중 하나이다.

〈그림 4-2〉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정치의 연도별 추이



(출처: 황종률 (2021) 45쪽의 그림 8을 전재함)

위 그림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까지 5%-6% 수준이었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에는 2% 가까운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렇게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이유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 투자부진으로 인한 자본축적의 저하, 그리고 생산성 둔화 등이 지적된다. 예를 들어, 홍준표·민지원 (2019)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1) 노동 투입력의 약화, 2) 자본 축적의 저하, 3) 신성장산업의 부재, 4) R&D 투자의 낮은 효율성 등 네 가지를 들고 있으며, 김동열 외 (2012)는 1) 인구구조의 변화, 2) 취약한 인적자본 형성 시스템, 3) 국내 투자의 위축, 4) 연구개발 투자의 낮은 효율성, 5) 내수 위축과 약화된 내·외수 선순환 구조, 6)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7) 금융부문의 낮은 경쟁력, 8) 낮은 사회적 신뢰도로 인한 사회적 자본의 부족 등 8가지를 들고 있다.

5. 가계부채 문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아래 <표 5-1>은 우리나라 가계신용의 연도별 추이와 증가율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2년 약 465조원이던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연평균 7.6%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약 1,728조원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 19년 동안 가계부채가 3.72배로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표 5-1>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연도별 추이와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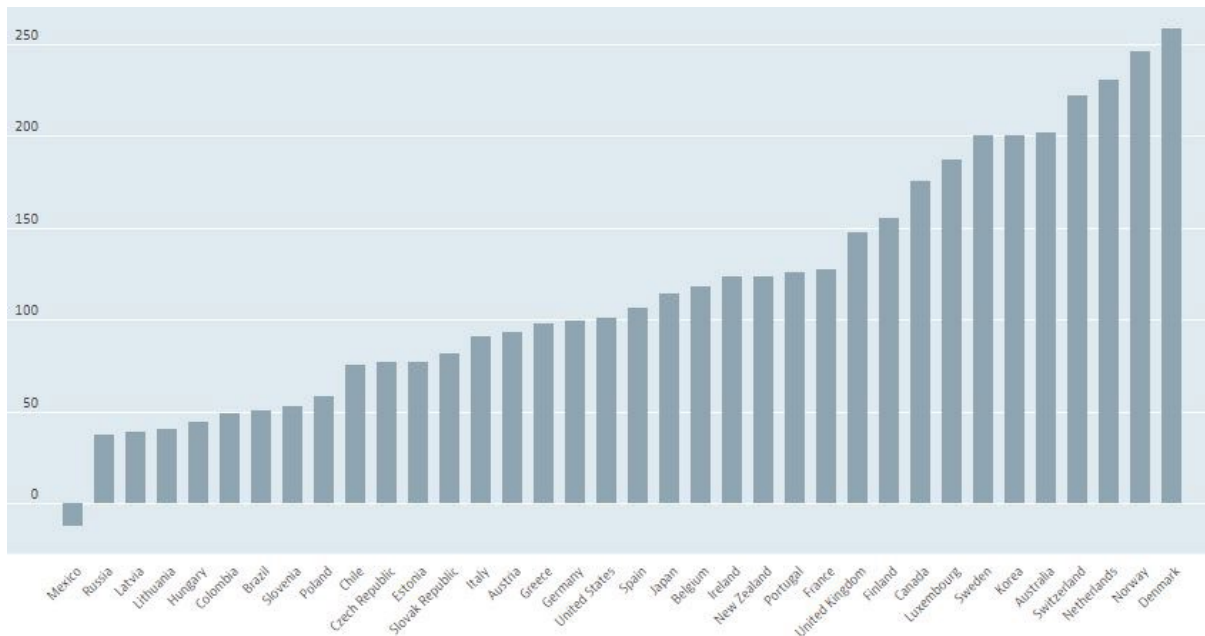
연도	가계신용 (십억원)	증가율	2002년 대비 규모
2002	464,712.0	-	100.0
2003	472,051.4	1.6%	101.6
2004	494,202.6	4.7%	106.3
2005	542,871.4	9.8%	116.8
2006	607,133.2	11.8%	130.6
2007	665,394.2	9.6%	143.2
2008	723,521.5	8.7%	155.7
2009	775,985.3	7.3%	167.0
2010	843,189.6	8.7%	181.4
2011	916,162.2	8.7%	197.1
2012	963,794.4	5.2%	207.4
2013	1,019,040.5	5.7%	219.3
2014	1,085,259.2	6.5%	233.5
2015	1,203,099.2	10.9%	258.9
2016	1,342,526.8	11.6%	288.9
2017	1,450,627.4	8.1%	312.2
2018	1,536,712.2	5.9%	330.7
2019	1,600,600.7	4.2%	344.4
2020	1,727,916.0	8.0%	371.8

(출처: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OECD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household debt / net disposable

income)’을 조사하는데, 다음 <그림 5-1>에서 보이듯이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200.7%를 기록하여, OECD 36개국 중 6위이다. 유럽 국가들을 ‘유로존’ 하나로 묶어 집계하는 IIF (Institute for International Finance)의 2021년 11월 Global Debt Monitor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2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2%로 세계 37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 비율이 1년 사이에 6%p 올라, 증가 속도 역시 가장 빨랐다.⁹

<그림 5-1> OECD 국가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



(출처: OECD, <https://data.oecd.org/hha/household-debt.htm>)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낮은 금리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 부담이 적어진 것이 한 원인이다. 위 <그림 3-3>에서 이미 보았지만, 우리나라의 대출금리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현저히 하락하였다. 2021년 11월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2.96% (총대출, 잔액기준)로, 2001년 11월

⁹ 유럽 국가들이 하나로 묶이면, 우리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이 통계에서 사라지므로, 우리나라가 가장 가계부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의 8.22%에 비하면 거의 1/3로 하락하였다. 위 제3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렇게 낮은 금리는 전세계적인 유동성 확장에 주로 기인하는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확장에 분명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강다연·이규석 (2021)은 2014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17개 시도별-월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대출이자가 가계부채의 매우 유의한 결정요인이라는 점이 주요 결론 중 하나이다.

둘째,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역시 가계부채 확대의 한 원인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반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이다. 다음 <표 5-2>는 우리나라 가계 신용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개 가계부채의 50% 내지 53%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다. 김선주·오정석 (2020)은 재정패널 자료를 실증분석하여 부동산 보유 가구의 총부채가 부동산 비 보유 가구에 비하여 3배 이상 높으며,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계부채를 증가시킴을 보였다. 김현정 외 (2013) 역시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국내 가계부채의 원인이 주택가격 상승률에 있음을 보였다.

<표 5-2> 우리나라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

연도	가계신용 (십억원)	주택담보대출 (십억원)	비중
2008	723,521.5	369,163.3	51.0%
2009	775,985.3	403,198.6	52.0%
2010	843,189.6	429,269.2	50.9%
2011	916,162.2	462,860.4	50.5%
2012	963,794.4	487,101.7	50.5%
2013	1,019,040.5	513,631.3	50.4%
2014	1,085,259.2	560,125.9	51.6%
2015	1,203,099.2	638,310.9	53.1%
2016	1,342,526.8	715,719.4	53.3%
2017	1,450,627.4	769,984.8	53.1%
2018	1,536,712.2	807,977.7	52.6%
2019	1,600,600.7	842,872.8	52.7%

2020	1,727,916	910,629.8	52.7%
------	-----------	-----------	-------

(출처: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가계부채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부실화 위험성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이 낮은 금리와 높은 부동산 가격인데, 이 두가지 요소에 변화가 생길 경우, 가계부채는 급속히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 향후 금리가 상승하여 가계의 이자 부담이 높아질 경우,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지는 가계가 나타날 것이고, 이는 가계대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향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의 담보가치가 줄어들어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역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다. 가계부채에 내재된 위험성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김우석 외 (2013)은 우리나라 거시경제 변수와 가계부채의 관계를 VAR 모형으로 실증분석하였는데, 가계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부실화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를 경고한다. 이동걸 외 (2014)는 가계부채의 유형별로 연체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박윤택 (2018)은 자산분위별로 가계부채의 상환불능 위험도를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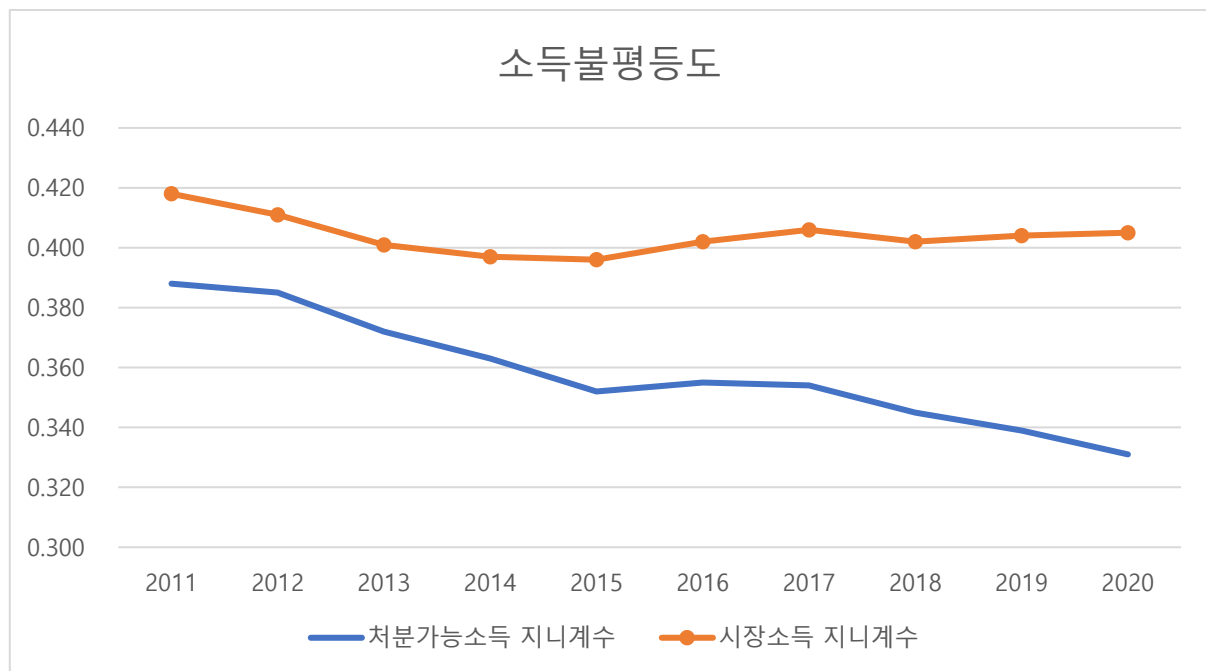
6. 소득불평등 문제

많은 학자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김낙년 (2018)은 기준이 다른 통계들을 보정하여 일치시키고 보완하는 작업을 통하여 2016년까지의 소득집중도를 추계하는데,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하든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든 1997년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집중도가 현저히 높아졌음을 보인다. 정혁 (2017)은 장기 시계열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소득불평등도 지표를 분석하는데, 역시 1994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소득불균등도가 악화되고 양

극화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한다.¹⁰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2010년 이후에는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본다. 김낙년 (2018)은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집중도가 2010년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음을 보인다. 정혁 (2017)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 10분위 중 하위 2, 3분위 그룹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성장하여, 소득불평등도가 일부 개선되었음을 보인다. 박원익·민병길 (2021) 역시 2008년 이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었음을 보인다. 단순히 지니계수를 보아도 이런 추세가 나타난다. 다음 <그림 6-1>은 우리나라의 지니계수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6-1>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 추이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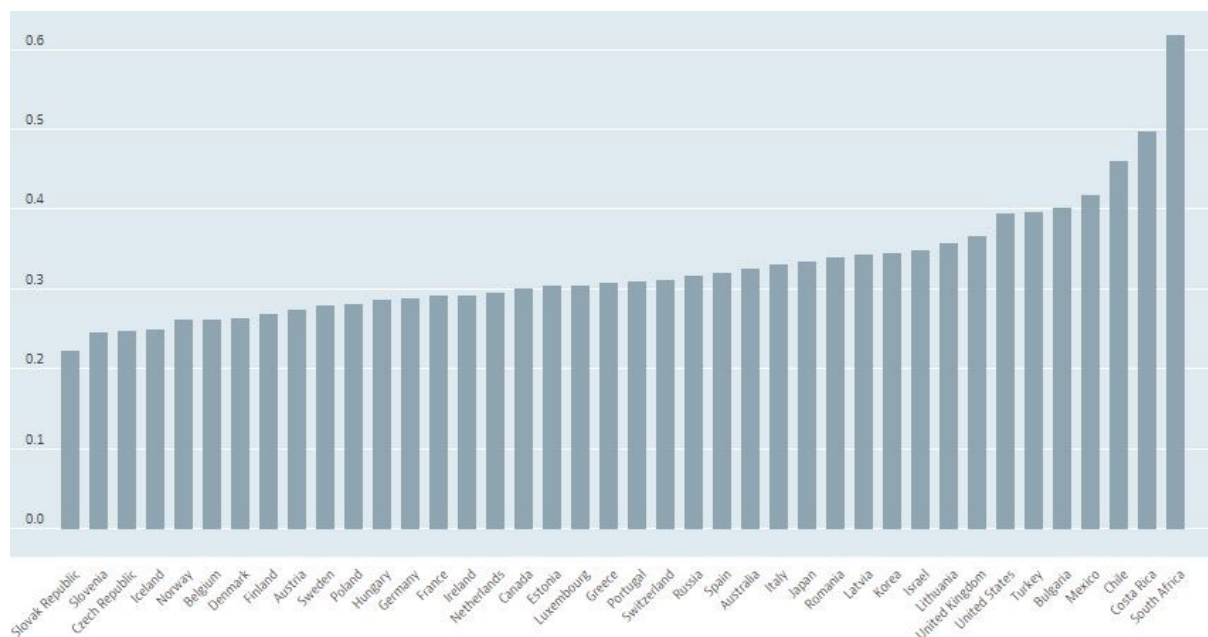


¹⁰ 전병유 (2017)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문헌적으로 검토한다. 전병유 (2017)에 정리된 연구들도 대개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었음을 보인다.

위 그림에서도 2010년 이후의 지니계수 개선 현상이 포착된다. 2010년 이후에 이렇게 소득불평등도가 완만하게나마 개선되는 이유로, 김낙년 (2018)은 하위 50%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했음을 들고, 박원익·민병길 (2021)은 최저임금의 인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등 정부의 정책개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한다. 박명호 (2016)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 감소를 원인으로 드나, 그 영향이 매우 단기적이었고 지속적인 소득불평등도 개선 효과를 내지는 않는다고 경고한다. 김낙년 (2018) 역시, 근로소득만 보면 소득집중도가 다소 개선되지만 비근로소득과 자산의 불평등도는 그 이상 심화되어, 2010년 이후에 전체적인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은 분명하다. 다음 〈그림 6-2〉는 OECD 36개국의 2020년 기준 지니계수를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우리나라는 OECD 36개국 중 11번째로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나라이다. 우리나라보다 소득집중도가 높은 선진국은 미국과 영국 정도에 불과하다.

〈그림 6-2〉 OECD 국가들의 지니계수 비교 (가처분소득)



(출처: OECD, Income inequality (indicator). doi: 10.1787/459aa7f1-en)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이유는 복합적이다.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지만, 정치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서휘원 (2016)은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정치적 원인을 실증분석하였는데, 노동조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최저임금제도, 사회복지정책, 조세정책 등은 유의한 효과가 없었으며, 무역의존도의 상승, 제조업 내의 저임금 노동자 증가 등의 거시경제 구조적 변화가 중요함을 밝혔다. 전병유 (2017)는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 즉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저소득층 한부모 가구의 증가, 가구원 수의 전반적인 감소 등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 둘째,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커지면서 소득불평등도가 심해진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임금불평등도가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기술의 발전, 비숙련노동의 해외 의존, 무역의 확대 등으로 보인다.¹¹ 임금불평등도의 증가는 소득분배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미흡한 소득재분배 정책 역시 소득불평등도를 높인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진입한 시간이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나라이다. 그 결과, 복지보다는 개발을 우선하는 경제정책의 기조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2000년대 이후 복지제도가 정비되고 있지만, 아직도 선개발국들에 비하면 미흡한 편이다. 많은 연구들이 조세와 이전소득이 소득불평등 개선에 효과적임을 보이나,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정책에는 아직 정비하고 조정해야 할 과제가 많다.¹² 넷째,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도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최근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하여 자산집중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장기적으로 자산의 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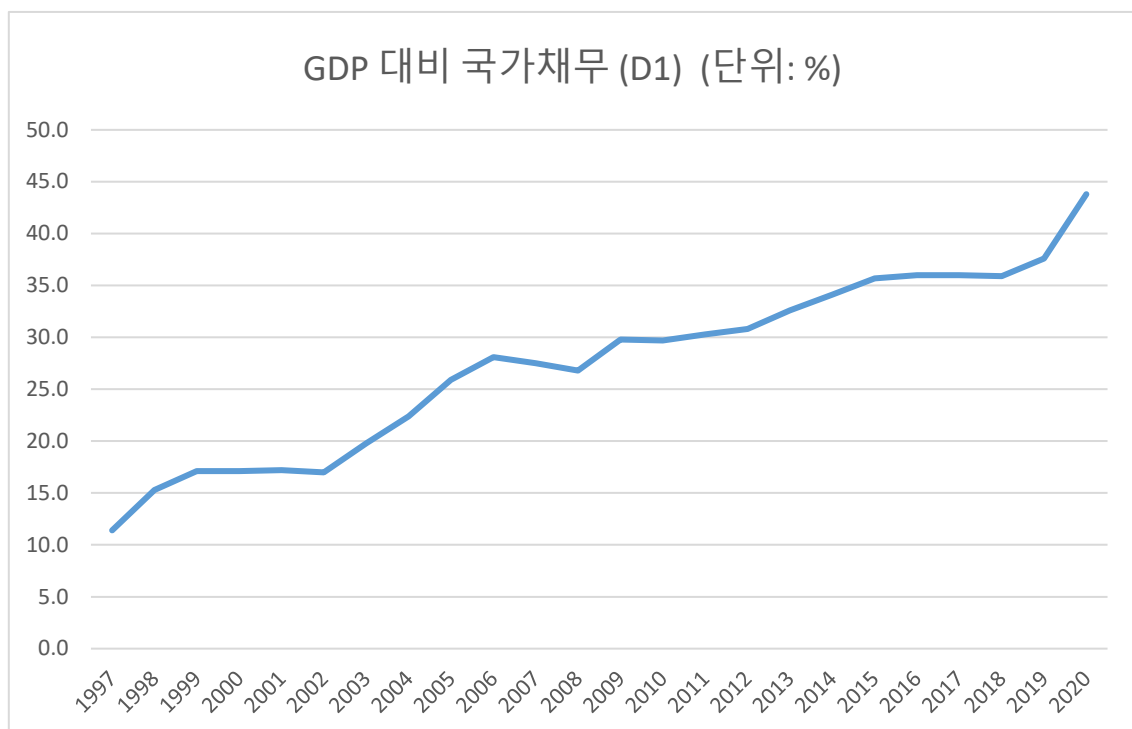
¹¹ OECD (2011) 참조.

¹² 예를 들면, 성명재 (2014), 이다미 외 (2016) 등.

7. 국가부채 문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1997년에 11.4%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 (D1) 비중’은 2020년에는 43.8%로 4배 가까이 늘었다.¹³ 다음 <그림 7-1>은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연도별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7-1> 우리나라 정부부채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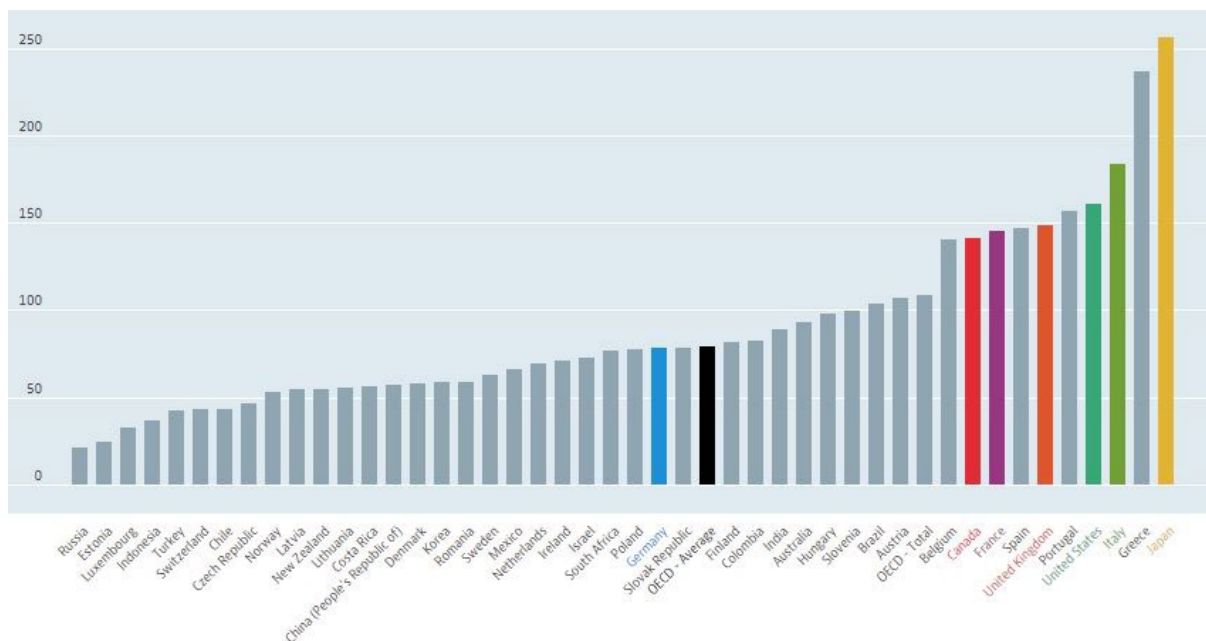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국가채무」)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외환위기 이후 한 차례 상승하였다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17% 대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급속히 증가하여, 2006년-2008년의 기간만 예외일 뿐,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늘고 있

¹³ 국가 채무의 기준 중 D1 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 합계’를 가리킨다. ‘일반 정부 부채’라고도 불리우는 D2 는 D1 에 비영리공기기업의 부채를 더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부채 기준이다. D3 는 D2 에 비금융공기기업의 부채까지 합산한 것이다.

다. 2020년에는 COVID-19의 영향으로 국가부채가 더욱 확대되었고, 2022년에는 GDP 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부채의 국제 비교는 주로 D2 로 이루어지는데, OECD 에 의하면 우리의 정부부채는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다음 <그림 7-2>는 OECD 가 집계한 각국의 2020년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 (D2) 비중’이다.

<그림 7-2> 주요국의 정부부채 규모 (GDP 대비 %)



(출처: OECD, General government debt (indicator). doi: 10.1787/a0528cc2-en)

그러나, 이런 국제 비교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를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에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내부거래로 간주하여 국가채무로 합산하지 않는데, 그 규모는 GDP 의 8% 정도로 추산된다. 또, 금융공기업의 부채는 D3 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정부부채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대개 복지지출로 인해 증가하였다. 박형수 (2019)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정부총지출의 증가분 113.0조원 중 46.1%인 52.1조원이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집중되었음을 보인다. 이영 (2012)은 OECD

국가간 자료를 실증분석하여 복지지출이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인다. 정부부채가 사회간접자본이나 제도 개혁에 집중되었다면, 장기적 효율성의 증가로 인하여 차세대의 부담이 줄어들고 재정건전성도 점차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 고용이나 선심성 복지지출에 정부부채가 집중되었다면 장기적으로도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가능성이 낮을 것은 당연하다.

정부부채는 국가신용도의 중요한 결정요인이고, 현 세대의 후생을 높이기 위하여 후 세대에게 부담을 넘기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¹⁴ 그 뿐 아니라, 정부부채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친다. Li et al. (2018)은 ‘computable equilibrium model of overlapping generations’을 설정하여 중국정부의 부채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태분석(simulation)하였다. 그 결과 정부부채는 단기적으로 공공자본과 산출물을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 민간투자, 총자본량, 산출물, 순수출 등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보였다.

¹⁴ Burbidge (1983) 등 참조.

결론

이상 한국경제학회 회원들이 선정한 한국경제의 7대 과제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7대 과제를 종합하여 성찰해 보면, 현재의 한국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음은 분명하다. 저출산과 생산성 저하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둔화는 심각한 수준이고, 재정정책의 확대와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정부부채 및 가계부채의 문제 역시 위험한 정도까지 악화되고 있다. 여러 경제부문의 양극화로 인하여 소득불평등도 또한 나빠지고 있어, 한국경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모두 낮아지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더구나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여서, 경제논리는 정치논리에 압도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정책보다는 근시안적이고 인기영합적인 경제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해결책을 마련하는 작업 역시 경제학자들이 도와야 할 일이고 이미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되었지만, 결국 국정 운영 주체의 판단과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부디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현명한 대책을 신속히 준비하길 기대한다.¹⁵

¹⁵ 한국경제학회는 7대 과제를 선정한 직후에 이 과제들에 대한 대책을 묻는 공식 질의서를 주요 대통령 후보들에게 보냈는데, 그 답변은 한국경제학회 홈페이지 ‘학회 공지사항 (<http://www.kea.ne.kr/event/internal-notice>)’에 게시되어 있다.

〈참고문헌〉

- 강다연·이규석 (2021), “주택금융 규제 실효성과 가계부채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34, 1157-1179.
- 국회예산정책처 (2018),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NABO Briefing」 제39호.
- 권지호·김도완·지정구·김건·노경서 (2019),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조사통계월보」 2019년 8월호, 한국은행, 16-32.
- 김낙년 (2018), “한국의 소득집중도: Update, 1933-2016,” 「한국경제포럼」 11, 1-32.
- 김동열·이부형·조호정·정민 (2012),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추이와 원인 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2-02-05(01).
- 김선주·오정석 (2020), “부동산자산 보유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적학회지」 제36권 제3호.
- 김우석·임인섭·오연탁 (2013), “거시경제 변수와 가계부채의 동태적 관계 분석,” 「한국산업경제저널」 5, 65-82.
- 김원규 (2017), “한국경제의 생산성 분석과 정책 시사점,” 산업연구원 Issue Paper 2017-419.
- 김원규·최현경 (2017), “한계기업 비중 확대와 생산성 둔화,” 「i-KIET 산업경제이슈」 제2호.
- 김원규·황원식 (2017),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산업연구」 제1권 제1호.
- 김현정·손종철·이동렬·임현준·나승호 (2013),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 및 지속가능성 분석,” 「BOK 경제리뷰」, 2013년 3월.
- 박명호 (2016),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한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 추정,” 「한국경제포럼」 9, 55-77.
- 박운태 (2018), “자산분위별 가계부채 상환불능위험도 추정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6, 193-210.
- 박원익·민병길 (2021), “국세통계로 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근로소득 및 통합소득 불평등,” 「경제발전연구」 27, 39-62.
- 박준우·여찬구 (2021),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안에

- 관한 연구: 해외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과 혁신 연구」 44, 261-280.
- 박형수 (2019),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 자료집, 81-99.
- 서희원 (2016), “한국에서의 소득불평등의 정치학: 1990년대 후반 이후 소득불평등 증가의 정치적 원인,” 「사회과학논집」 47, 213-233.
- 성명재 (2014), 「우리나라의 소득불균등 추이 및 조세부담. 재정지출 수혜 분포」, 보건복지포럼 2014, 17~31.
- 송유미·이제상 (2011),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 27-61.
- 우석진 외 (2021),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경제발전학회-서울사회경제연구소 공동심포지움 발표자료, 2021년 5월 14일.
- 이다미·강지혜·조한나 (2016), “가구주의 노동시장 특성에 따른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불평등과 요인분해: 2010년·2015년 소득분배상태의 변화,” 「사회보장연구」 32, 85~124.
- 이동걸·전성인·정재욱·변동준 (2014),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연체 결정요인 및 취약성 연구,” 「금융연구」 28, 137-178.
- 이삼식 (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 대책 연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림 (2012),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전망과 정책적 함의,” 「한국인구학」 35, 1-28.
- 이영 (2012), “재정건전성, 경제위기, 그리고 복지제도,” 「한국경제포럼」 4, 65-75.
- 전병유 (2017), “한국 불평등구조의 특성과 변화요인의 탐색적 연구,”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7-07-01, 15-57.
- 정혁 (2017), “한국 소득불평등 구조의 실증적 이해와 포용적 성장전략,” ”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7-07-01, 58-115.
- 한국개발연구원 (2012),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 전망」, 국민연금연구원, KDI 용역보고서 2011-07.
- 한국생산성본부 (2007), 「중요소생산성 국제비교」, 생산성연구총서 2007-02.
- 한국생산성본부 (2017), 「중요소생산성 국제비교」, 생산성연구총서.

한진희·신석하 (2008),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성장회계 및 성장회귀분석,” 「한국개발연구」 30, 1-70.

홍준표·민지원 (2019),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2019년 8월 9일.

황종률 (2021),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 추정 - 비관측인자 모형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현안분석 제101호.

Andrew, D., C. Criscuolo and P.N. Gal (2016), “The Best versus the Rest: the Global Productivity Slowdown, Divergence across Firms and the Role of Public Policy,” OECD Productivity Working Papers, No.05, November.

Burbidge, J.B. (1983), “Government Debt in an Overlapping-Generations Model with Bequests and Gifts,” *American Economic Review* 73, 222-227.

EU KLEMS (2009), “Growth and Productivity Accounts,” EU KLEMS Data, <http://www.euklems.net>.

Gal, P., G. Nicoletti, T. Renault, S. Sorbe, and C. Timiliotis (2019), “Digitalisation and Productivity: In Search of the Holy Grail,”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533.

Jones, R.S. and J.W. Lee (2016), “Raising Korea’s Productivity through Innovation and Structural Reform,” OECD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No.1324, September.

Li, S., S. Lin, Y. Wang, and F. Zhai (2018), “China’s Growing Government Debt in a Computable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Pacific Economic Review* 23, 359-384.

Mosiashvili, N. and J. Pareliussen (2020), “Digital Technology Adoption, Productivity Gains in Adopting Firms and Sectoral Spill-overs: Firm – level Evidence from Estonia,”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638.

OECD (2011),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OECD, Paris.

Sorbe, S., G. Nicoletti, and C. Timiliotis (2019), “Digital Dividend: Policies to Harness the Productivity Potential of Digital Technologies,” OECD Economic Policy Paper No. 26.